



일반논문

해방과 여론조사의 출현, 여론정치의 시대

— 한국여론협회,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이행선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심영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김연주

나영정

지방자치형 분권헌법 개정

이종수

해방과 여론조사의 출현, 여론정치 시대

한국여론협회,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이행선

국민대학교

〈논문요약〉

해방공간의 정치적 자유를 허가한 미군정은 조선 인민의 각기 다른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정치적 자유란 사상의 자유를 뜻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사상으로 포섭됐거나 되어가는 인민을 관리해 미국을 추종하도록 조장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북조선의 소련과 일종의 체제·사상 경쟁을 펼치게 된 상황에서 미군정의 정치적 선전이 조선 각지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렇다면 해방은 드디어 근대적 의미의 여론정치가 조선에서 행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인민의 여론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사건’은 본질적 의미의 ‘정치’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민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에 따라 정치지도자를 선별하고 그를 매개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대의정치의 형성과정을 뜻하기도 했다. 해방공간은 이러한 정치감각을 습득해가는 인민의 ‘지성’이 성장·발현되는 장이

있던 것이다. 이때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방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설문’의 정치적 의미와 그 가능성이 ‘재발견’되게 된다. 요컨대 이 글은 인민의 지성성장과 민주적 정치 훈련 습득과정에서, 조선의 언론기관이 여론조사·설문을 통해 여론정치 및 ‘지식인정치’를 꾀하는 사회사적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 주요어: 해방공간, 설문, 신문기자, 민주주의, 미군정

1. 해방과 조선언론기관

일제말과 해방의 연속을 논할 때, 인민(人民)을 억압하는 권력주체만 바뀌었을 뿐 근대국가의 구조적 폭력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해방은 그 구조적 억압의 틈새를 만들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공공연히 표방되기 시작했고 대다수가 문맹인 인민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정치집단이 난립했고 거리의 정치가 횡행하면서 해방공간은 혼돈의 시대로 해석되기도 했다. 정치적 자유를 허가한 미군정은 조선 인민의 각기 다른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회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사상으로 포섭됐거나 되어가는 인민을 관리해 미국을 추종하도록 조장할 필요가 있었다. 정치적 자유란 사상의 자유를 뜻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조선의 소련과 일종의 체제·사상 경쟁을 펼치게 된 상황에서 미군정의 정치적 선전이 조선 각지에 깊숙

이 파고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렇다면 해방은 드디어 근대적 의미의 여론정치가 조선에서 행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인민의 여론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사건’은 본질적 의미의 ‘정치’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민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에 따라 정치지도자를 선별하고 그를 매개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대의정치의 형성과정을 뜻하기도 했다. 해방공간은 이러한 정치감각을 습득해가는 인민의 ‘지성’이 성장·발현되는 장이었던 것이다. 친일경찰 등 친일파 청산 실패, 정치모리배의 출몰 등 정치적 좌절감이 큰 해방의 국면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자체가 인민의 정치참여를 더더욱 요구했으며, 참여는 인민이 근대국가의 시민이 되는 훈련과정이기도 했다. 간접적이지만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치감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제도적 장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가 자율적이어야 하고 상시적인 것이기도 해야 했다. 이 역사적 소임을 언론기관이 자임하고 나섰다.

식민지기 신문사는 자타가 공히 ‘신문정부’라 할 정도로 조선인의 목소리를 제한적이지만 공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었다. 하지만 만주사변 즈음 일제의 검열이 강화되고 중일전쟁 이후 한층 더해졌으며 결국 조선·동아일보가 폐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이 되자 용지난(用紙難)에도 불구하고 해방일보를 시작으로 각종 신문사가 창설되면서 다시 인민의 정치적 대변조직이 될 수 있었다.¹⁾ 그 당시에는, 인민을 계도하는 지식인 조직으로서 신문사의 정견이 인민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인민들이 민주주의제도를 목말라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주의와 관련해 출간된 다수의 저

1) 해방공간 언론과 그 구조에 관해서는 민족운동사적 관점에서 정리한 안종묵(2012)을 참조.

서에서 ‘민주주의는 여론을 기저’²⁾로 하며, “여론의 자유란 신문·통신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소유이며 대중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³⁾고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사는 인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여론에 의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도입했다.

여론조사는 미군정에서 먼저 실시한 것이기도 했다.⁴⁾ 미국은 소련과 체제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선과 조선인에 관해 지식이 일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정 차원의 여론 담당기관이 필요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던 민간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대신해 또 다른 식민지배자로 비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여론을 참조해 민주정치를 실현해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인 조선을 미국의 우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보제공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복합적인 기능을 했다. 실제로 미군정의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으로 보고될 뿐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해방일보가 창간되지만 여론조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법이 부재한 연유로 여겨지는데, 본격화된 것은 동아일보가 창간된 이후부터였다. 여론조사는 요즘에도 그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하물며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은 초창기의 여론조사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해방공간 조선 신문사의

2) 『輿論政治』, 『동아일보』(1945/12/10, 1면).
 3) 『美言論界의 三巨頭』, 서울에 들렀다가 上海로, 『동아일보』(1946/02/23, 1면).
 4) 해방 이전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의 내용은 언론에 수시로 소개된 바 있다. 제2차 대전 시기에는 “미국의 여론이 공정한 것이 아니고 세력적이며 선전에 의한 것이 쉽다”고 평가절하되기도 했지만, “미국은 여론의 국가”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인식들을 바탕으로 미군정의 시도를 바라봤을 것이다. 한후구(1942), 한후구·민충환 편(2009, 492).

여론조사는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최초의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자인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존 여론조사 연구 역시 미군정에 집중되었다.⁵⁾ 미군정이 조사한 정치동향(political trend) 및 여론동향(public trend)은 주한미군정의 정책 참고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동향조사는 정기적으로 혹은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되었으며, 미군정 정보참모부가 간행하는 정보보고서(G-2 Report)의 주요 항목으로 수록되었다. 해방공간을 구조적 정치지형으로 조울했던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조선인의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론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했다는 점에서⁶⁾ 여론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⁷⁾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극히 일부만이 조선인에게 공개되어, 조선인이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참여와 정치감각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미군정의 것은 군정당국과 조선인만을 대타향으로 한다. 조선인 지식인과 인민간의 계몽을 가시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방공간의 미군정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여론조사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었다.

5) 이성근(1985), 전상인(2001). 이외, 주한미군사령부 방첩대의 「시민소요사건보고서」와 공보부의 「지역여론조사보고서」를 묶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5) 참조.

6) 정용욱은 미군정의 왜곡보도를 ‘여론공작’이란 용어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정용욱 2003). ‘여론공작’은 여론조사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번스 박사가 미국무사절단과 남조선에 왔을 때 식민지기 일본인의 토지를 재분배하는 계획을 구상한다. 그러자 미군정은 조선 소작인들이 지금 당장 땅을 원하지 않고 미래의 정부가 주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번스의 개혁안을 무산시켰던 것이다(Gayn 1981, 432-433) 미군정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1946년 3월 12일과 5월 15일에 토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다. 여기서 3월은 67.2%, 5월은 64%가 새롭게 수립될 한국 정부에 의한 토지분배를 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조사대상 수가 5월의 경우 총 738명에 불과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가 할 수 있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5, 402, 434) 참조.

7) 미군정의 선전 활동에 대해서는 김민환(1991), 차재영(1994), 장영민(2001), 정다운(2006), 김영희(2005), 김균(2011), 김학재(2011) 참조.

최근 미군정과 조선인 여론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김보미의 연구성과가⁸⁾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시행한 초기에 행한 일련의 조치를 간과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또 다른 형태인 ‘설문’을 활용해 여론수렴에 활용한 점을 미처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해방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설문’의 정치적 의미와 그 가능성이 ‘재발견’되었다. 여론조사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인민과 지식인의 소통방식의 하나였던 설문이 식민지기와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기능하게 되었다. 설문의 대상은 소수의 조선인 엘리트였다. 여기에는 식민지기 일제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이들까지도 포함됐는데, 그들이 계몽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고 인민의 우위에 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론조사와 설문의 역학 속에 여론조사는 여론수렴과 동시에 모든 인민에게 그 결과를 추종하도록 강요하는 여론정치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듯 여론정치는 미군정과 조선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인 엘리트와 인민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여 김보미의 연구는 설문과, 초기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의 규모와 취지가 빠져 있고, 여론조사의 복잡한 함의를 결여시키고 말았다. 또한 인민을 여전히 무지한 존재로만 가정하여 여론조사가 중요한 민주주의 훈련과정임을 조명하지 못했다.

즉 여론조사 제도 도입은 미군정과 언론기관, 인민 모두의 소통방식 변화를 초래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군정과 인민 사이의 중간에 끼여 있는 언론기관의 의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언론기관은 민족국가 수립과 민중계몽이라는 사명하에 분투하기도 했지만, 인민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이라는 권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8) 김보미(2012).

수가 없다는 통념은 언론기관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정치적 성향을 유의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여론 정치로 활용될 수 있었고 그만큼 언론의 정치적 입장이 여론조사의 왜곡을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더욱 확장하면 언론기관의 정치성향뿐 아니라 여론조사가 행해지는 해방공간에서 언론 자유의 난맥상을 살펴봐야 한다. 신문기자는 지배권력의 언론통제에 가장 민감한 존재였다. 또한 길거리에서 인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직접 행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통치권력에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었던 신문기자를 통해 해방의 의미와 정치적 실감을 묻고, 언론 자유의 현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처럼 어떤 특정 제도의 도입과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재조명하려는 성격의 글은, 제도의 긍정적인 발달과 그 가치를 일관되게 서술하여, 그동안 미처 이를 조명하지 않았던 기존연구를 비판하기 쉽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았듯 당대의 맥락에서 제도를 둘러싼 ‘빛’과 ‘그늘’이 함께 공존하기 마련이다. 여론조사와 설문제의 제도적인 가치를 논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행해진 해방공간의 억압적이기도 했던 언론상황을 함께 고려해야만 여론조사의 가능성을 더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장 1절에서 먼저 ‘빛’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의 도입과 그로 인해 재범주화되는 설문, 그 시행을 둘러싼 여론정치의 사회사적 의미와 여론반영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늘’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혼란한 정국에서도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언론사의 노력들을 살펴본다. 해방공간의 언론사는 정파성에 매몰되어 공정정보가 불가능했다는 게 통념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론조사를 불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분투했던 언론인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두에서 여론조사를 직접 하는 것을 포함해 공정한 언론을 위

해 노력한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야만 여론조사·설문의 존재의미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명한 이후 3장에서는 2장 1, 2절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행해진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당대 주요 현안과 그 변화를 엿보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인민의 지성 성장과 민주적 정치 훈련 습득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미군정이 아닌 조선인의 언론기관이 여론조사·설문을 통해 여론정치 및 지식인정치를 꾀하는 사회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론조사가 행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인민과 조사기관의 정치적 거리, 여론추이, 조사문항이 보여주는 당대 중요 현안, 여론왜곡 등을 통한 여론정치의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연구의 범주는 해방공간에서 한국여론협회와 조선신문기자협회가 중심인데 동아일보 등 신문사 자체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동아일보 여론조사국은 설립 초기에만 규모 있는 활동을 하고, 한국여론협회가 결성되자 직접 조사를 행하지 않고 한국여론협회, 외국 여론조사 기사, 미군정의 조사 등을 대신 보도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국여론협회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이들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은 이러타>와 <여론의 여론> 코너를 상시 운영한 동아일보에 보도되었으므로 동아일보 자료를 함께 참조했다. 조선일보와 자유신문은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어 포함했다. 그리고 단정수립 이후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여론조사를 주도한 (공보처는 일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기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당대 정세와 맞물려 그 변화과정과 의미 등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세한 것은 3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신뢰하기 어려운 좌·우익 신문의 여론조사 수치를 대조하여 산술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해방공간은 “소수 특권지식계급에 의해

민족의 주도권이 확보되던 식민지기를 벗어나 민족대중으로 그것이 이행⁹⁾ 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신문은 정치감각을 습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동시에 인민은 여론조사제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지배권력에 전달할 수 있었다. 인민과 지배권력 간에 쌍방향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민의를 반영해 (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수행한다는 ‘여론정치’¹⁰⁾의 민주주의 정치원리가 현실화되었다. 이때 권력과 인민 사이에서 그 목소리를 매개하는 여론정치를 활발히 한 여론단체와 언론사에 주목했다. 좌익의 협회에 대해¹¹⁾ 만든 우익의 조선신문기자협회 사무실이 동아일보를 근거지로 했다. 또한 한국여론협회(우익)와 군정청, 외국 언론 등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으며 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협회와 동아일보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전제를 가

9) 『민성』(1947/10/18).

10) 이 용어에 대한 보충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당대 글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아래의 정치는 여론정치라야 하고 여론기관은 또한 민중의 소리를 속임 업고 꾸밈 업시 직접 반영하는 참된 소리의 기관이어야 한다.” 『본보 독자 제1회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희망은』, 『자유신문』(1948/02/16, 2면). 여기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의 반영만을 말하고 있지만, 여론과 군중 심리를 구분하면서 여론정치를 논한 당대의 시선도 있다(『여론정치』, 『동아일보』 1945/12/10, 1면).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지식인의 지도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해방공간은 지식인의 ‘설문’을 통해 엘리트와 지배권력의 위로부터의 계몽이 작동하거나, 지배권력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되도록 처음부터 조작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책을 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과 대중지성의 성장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동한 맥락을 고려해 ‘여론정치’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1) “동아일보는 해방 후 초기 기자단에 가입도 못하고 기자 취급도 못 받았다.” 이에 반감을 갖고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우익진영의 기자협회를 만든 것이다. 좌익의 조선신문기자회는 각사의 편집국원을 일률적으로 가입했는데, 이에 대해 우익진영은 개인단위로 가입을 받았다. 김사립 편(1949, 26).

정한다면 당대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를 최대한 타자화한 언론사임을 감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2. 여론조사와 해방공간 여론정치의 가능성

1) 여론조사·설문과 여론반영

일제 말기 검열기관이었던 관방정보과는 조선총독부의 공보업무를 담당했고, 해방이 되자 미군정에 의해 ‘조선인관계정보과’로 전신했다. 일제 말기 조선인의 내면이 없었다고 말해질 만큼 여론을 드러내지 못했다면¹²⁾ 해방 이후에는 동기관이 과학적인 통치합리성이라는 명목으로 내면을 솔직하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계량화하는 여론조사를 행하게 된다. 이후 미군정의 여론 담당부서의 변천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미군정의 초기 조사는 현지조사가 주였다. 각 지역에 출장을 나가 인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치지 않고 벽보를 관찰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울 이북지역은 정치 시찰을 자주했다. 또한 여론 조사시 선전물을 살포하면서 미군정의 정책을 홍보했다. 1946년 4월에는 지식인에서 일반대중으로 여론조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각 도청에 공보과를 설치

12) 이런 견해는 오늘의 연구자뿐 아니라 당대에도 많이 발견된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오늘날의 저널리즘은 사회의 표면을 흐르는 ‘유티미즘’만을 반영한다. 오늘날의 여론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유티미즘’의 소산이다. 그리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리 안 될 수도 없다. 오늘의 정세는 ‘페시미즘’의 표화를 허할 리가 없다!” 서인식, 「문화시평」, 『조선일보』(1940/02/08), 서인식(2006, 177).

〈표 1〉 미군정 여론 담당부서

부서 변천	주요 활동
1945.9.20. 「정보·공보과」(IIS)	「여론처 조사계」
1945.11.25. 「정보과」	「여론처 대민접촉계」 → “여론 청취 조사” 방법(벽보관찰, 집단인터뷰, 서울과 이북지역 정치 시찰) 조사와 선전활동 동시
1946.2. 「공보국」	「여론국 여론조사과」가 신설되면서 미군정의 여론조사방법이 체계화됨, 양적조사 → “자기기입식 우편조사”(설문지 보내 응답지 받는 방식) 일부, 전국 주요도시에 요원 파견, 주류 “조사원방문과 면담조사” 방식(우편·인구조사·주민등록체계 정비 안 된 상태; 해방 직후 12세 이상 문맹률 77%, 1948년은 41%로 떨어짐)
1946.3. 「공보부」	1946.10. 2국에서 5국으로 개편
1947.5.30. 「공보원」	지역공보원 지부, 지역별 조사 강화(미군 공보프로그램이 작은 마을에 침투된 정도를 측정), 총선거 선전에 노력을 기울임

하면서 지역의 여론에 집중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 주민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은 거점지역만 적당히 조사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공중의 여론 형성보다는 ‘여론지도’에 방점이 있었고, 미군이 생산한 각종 전단지 등의 유포 정도 등을 측정하여 여론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인민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라 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구술과 서면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경험은 해방공간의 중요한 정치적 훈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군정이 1946년 4월 여론조사 대상을 확대할 때 민간신문의 여론조사도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동아일보는 여론조사국을 신설하면

13) 김보미(2012, 14-59).

서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서 여론 반영을 좀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민의를 환기하고 민의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가일층 긴밀하게 하기 위한 사명”¹⁴⁾을 내세웠다. 여론의 결과가 신문에 게재되어 전 인민이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의 정치참여 욕망을 일정 부분 만족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을 매개로 다양한 공동체 및 정치집단의 편가르기가 가시화되어 정치세력 간의 쟁투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와 어찌됐든 인민과 신문사 내지 미군정과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진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인민이 드디어 지식인의 계몽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과 함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당대 수많은 신문이 특정 이념을 대변해 언론의 공정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기존 통념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은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삶 속에서 체득한 인민의 지성을 너무나 폄하하는 견해이다. 인민은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며 신문 역시 분별·지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민의 ‘경험-지’ 성장에 따라 (역시 인민이기도 한) 지식인의 위상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쟁투의 장이 해방공간의 특질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론조사에도 투사되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가두조사, 엽서 발송, 인터뷰의견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했는데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병행한 ‘지식인 대상 설문’의 성격이다. 각 방면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대중의 여론은 과연 어떠한가를 독자 여러분에

14) 『輿論調査局特設 一般社會와의 直結紐帶 各界人士의 名簿登錄』, 『동아일보』(1946/04/09, 1면); 『여론조사』, 『동아일보』(1946/04/10, 1면).

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답변은 신문에 게재되었다. ‘무지한’ 인민의 의사는 다수라 할지라도 여론이 아니라 감정적인 ‘군중 심리’로 간주될 우려가 있었고 올바른 여론 형성과 계몽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실상 첫 설문이 겨우 지식인 14명에게 의사를 타진하고서 “여론은 좌우합작을 지지한다”¹⁵⁾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원래 여론조사란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 아닌 인민 대다수가 구현하고자 하는 특정한 생활양식을 말한다.¹⁶⁾ 하지만 이 설문조사는 인민보다 ‘당연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과거 계몽주의적 발상에서 발원한 것으로 그 형식은 지식인의 우월성을 인민의 정신에 (재)기입하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¹⁷⁾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설문조사는 ‘지식 권력’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세를 보여주는 유력한 지표가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특정 지식인 그룹에 의해 그 대세가 조장되는 지식인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식민지기에도 설문은 있었다. 하지만 잡지 『신민』, 『삼천리』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받는¹⁸⁾ 설문의 정치는 현실적으로 미약했었다. 단순히 ‘설문’이었던 것이 해방공간에서 여론조사로 재범주화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양태 중 하나인 여론정치의 층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환기하는 주도적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잡지에서 자주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신문사-잡지사 간 상호보완적으로 지식인

15) 『輿論은 이러다: 左右合作을 支持』, 『동아일보』(1946/07/16, 3면).

16) 이성용(2003, 51).

17)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정의와 진리의 첨병으로서 지식인을 지칭하고 지성의 판단력으로 진리를 사수해온 지식인의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식계급의 소리」, 『조선일보』(1945/12/06, 조각 1면).

18) 이경돈(2010, 41-63) 참조; 이경돈(2011).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해방공간에서는 설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여론조사를 번역게재하고 특히 꺾림여론조사를 원용하여 인민이 여론조사의 과학성과 보편성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극했다. 그리고 여론이 중요해진 만큼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높아져갔다. 여론조사를 통한 ‘민음의 정치’가 실상 가능했느냐는 물음이다. 우선 인민이 조사원을 경관, 고등경찰로 오인해 답변을 잘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지배집단을 신뢰하지 않는 인민은 여론조사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조사해봤자 삶의 조건은 바뀌지 않음을 간파했다. 조선인 언론인인 설정식도 미군정 여론조사의 처리방식을 일제 식민지의 연장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조사원들도 미군정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나 유도심문을 하는 등 스스로 그 객관성을 결여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좌/우익 여론협회의 갈등도 심했다. 좌익성향의 조선여론협회와 조선신문기자회(1945.10)에 대한 대당(對當)으로 우익 진영에서 한국여론협회(1946.7), 조선신문기자협회(1947.8)를 창립했다. 1947년 7월에는 대한독립청년단과 서북청년회가 좌익성향의 조선신문기자회의 가두조사에 550명의 소속 회원을 동원해 공위에서 남로당을 제외하는 표를 던졌는데 결과는 174표에 불과했다면서 결과조작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¹⁹⁾ 한민당의 기관지격인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 우익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두 번은 예외였다. 한 번은 동아일보가 직접 한 조사가 아니라 군정청 여론국에서 한 것을 대신 발표한 지면에서 설문에 참여한 70%인 6,037명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²⁰⁾ 이것은 좌익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음의 한 번은 중앙청

19) 「不正確한 街頭輿論 記者會의輿論調査反駁」, 『동아일보』(1947/07/09, 2면).

공보부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한국여론협회가 1,262명을 대상으로 충무로입구와 종로네거리에서 선거인등록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요였는지 조사했는데, 이 중 91%가 강요로 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보도했다. 이에 공보부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을 수 없으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에는 그 조사장소와 시일 내용을 미리 명시해야 한다고 요망했다.²¹⁾ 하지만 각 여론조사기관은 오히려 다른 정파의 모략을 방지하고 공평하고 과학적인 측정을 위해 조사시일을 비밀에 부치려했던 것이다.²²⁾ 동아일보의 입장과 중앙청 공보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비방 때문인지 해방공간에서 신문보다는 라디오가 가장 인기 있는 선전매체였다고 한다.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당대의 현실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민은 신문을 통해 당대를 배웠고, 여론조사는 언론사의 언론조사국에 한정하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의 도구로써 다방면에서 활용되었다. 단순히 ‘설문-여론조사’를 둘러싼 지식인과 인민의 투쟁을 넘어서, 여론조사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로 식으로²³⁾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성장의 긍정적 기제로 자리 잡아갔던 것이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지사 진출 발령을 거부하고 유임운동을 하고 있던 전라남도지사 서민호의 문제와 관련해 과도정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²⁴⁾ 또한 공보부 여론조사

20) 「政治自由를 要求 階級獨裁는 絕對 반대 軍정청여론조사 (一)」, 『동아일보』(1946/08/13, 3면).

21) 「民間輿論調査에 過政公報部要請」, 『경향신문』(1948/04/16, 2면).

22) 「여론조사 비방에 기자회견 논박 성명」, 『조선일보』(1947/07/11, 조간2면) 참조.

23) 보드리야르식으로 보면 여론조사는 신문의 성공만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의미부여 이전에 해방공간의 조선인에게는 날 것 그대로의 ‘외설’ 충격일 수도 있다. 보드리야르(2001, 104) 참조.

국은 여론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곡배급사정과 같이 중요현안에 대해 조사과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실정을 파악하고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역할도 했다.²⁵⁾ 무엇보다 이 무렵 경기도청의 활동은 문제적이다. “민중의 공정한 여론을 수집해 도정의 명랑을 기하고자 새로운 방법으로 도내 21부군과 각 면의 유력자를 조사하여 이들에게 매주 한 번 혹은 수시로 모든 방면의 여론을 조사케 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건설적 의견을 듣²⁶⁾는 방안을 구상했다. 경기도는 이전에도 구호자들에게 곤궁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 관청이 도와줄 사항을 조사하여 구호시책을 추진했다.²⁷⁾ 이것은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와 상태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는 사회조사로서 그 가치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례는 단독정부 수립 이후 나병환자 대책 수립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보건부에서 전국의 2만여 명에 달하는 나병환자를 대상으로 ‘방랑하는 것이 좋으나, 환자끼리의 사회를 원하느냐’ 등 다양한 조사했는데²⁸⁾ 마찬가지로 사회조사의 성격이다. 민의를 더욱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도정을 ‘사회조사’로 전신(轉身)해가는 여론조사 제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 공정한 여론반영을 위한 노력

1장에서 밝혔듯이 이 절은 혼란한 정국에서도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언론사의 노력들을 살펴본다. 해방공간의 언론사는 정파성에

24) 「全南道廳人事異動問題」, 『경향신문』(1947/07/09, 2면).

25) 「道義心있는 食糧配給所 四十七%가 부정」, 『동아일보』(1947/12/14, 4면).

26) 「民間有力者動員 輿論調査를 實施」, 『동아일보』(1948/02/06, 2면).

27) 「要救護者輿論調査」, 『동아일보』(1946/12/19, 2면).

28)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동아일보』(1949/09/04, 2면).

때몰되어 공정보도가 불가능했다는 게 통념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론조사와 설문을 불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분투했던 언론인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두에서 여론조사를 직접 하는 것을 포함해 공정한 언론을 위해 노력한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야만 여론조사·설문의 존재의미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에서 행하는 여론조사는 해당 기자의 소임이었다. 조사원의 유도심문 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기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방임정책을 취하면서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기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그 선발과 양성이 중요해졌다. 특히 여론조사 분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언론기관, 학교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26년 오노 히데오가 동경대에서 최초로 비교신문사 강의를 했고, 1932년 4월 정규 신문학과가 최초 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부재한 상황이었다.²⁹⁾ 초기 여론조사 기법 습득은 미군정 공보기구 여론국 내 한국인 직원에 대한 미국인의 업무 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³⁰⁾

또한 조선인들도 자체적으로 1946년 1월 조선신문연구소를 창립하고, 특히 언론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언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947년 4월 조선신문학원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모집·양성하여 언론사에 입사시켰다. 이후 1949년 4월 처음으로 서울대 문리과대학에서 신문학강좌를 개설했다. 여론조사가 독립적인 수업으로 행해진 것은 <여론과 선전>(1952), <여론조사법>(1954)이었으며, 이즈음 1954년

29) 정진석(1995, 7).

30) 김보미(2012, 26).

3월 홍익대에서 최초의 신문학과가 설립되었다.³¹⁾

군정청 출입기자라는 직함이 보여주듯 기자는 식민지기에도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최고 권력자들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언론사의 급증과 입법·사법·행정 등 관료사회로의 진출이 대폭 열리면서, 경제적·정치적으로 직업 간의 위계가 구조적으로 변동하게 됐고 신문기자의 사회적 위상 역시 재조정되게 된다. 이 국면에서 기자의 복잡한 시선을 엿볼 수 있겠다. 하나는 식민지기보다 제고된 기자의 자존감, 두번째는 언론의 자유 보장이다. 근대 초기 신문은 계몽의 도구로써 신지식을 전달했고 1910년대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세 부적인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민간에 떠도는 소문을 수합했다. 그러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아래 세태 인정과 최첨단의 유행지식 등 다양한 이질성이 혼효(混淆)한 대중 뉴스신문으로 전신하였다. 기자는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정론을 양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고, 동시에 문예가로서 문인기자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다.³²⁾ 보통 ‘논설, 정치(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분류되었던 신문에서도 사회부기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1924년 11월 19일 ‘철필구락부’를 결성했던 사회부기자들은 기자 중의 기자로 불렸고,³³⁾ 해방 이후 회고에도 “사회부 제일선기자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³⁴⁾만큼 훈련과 검증과정이 혹독했다.

하지만 전국적 유통망과 민족의 표현기관이란 자긍심이 생산한 기사는 당국의 주된 취체(取締)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후반 조선·

31) 정진석(1995, 52-58).

32) 권보드래(2002, 178-183).

33) 정진석(2008, 212).

34) 김사림 편(1949, 41).

동아일보의 좌파 기자들이 퇴출되고, 검열의 결과가 인쇄물의 겉으로 드러난 ‘자기현시적 검열’에서 그 흔적이 지워진 ‘자기은폐적 검열’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30년대 민간신문의 기업화와 상업성 추구에 따라 문화면이 증강되어 통속오락화되어 갔다.³⁵⁾ 만주사변과 국가총동원법 무렵 두 번에 걸쳐 검열이 강화되고,³⁶⁾ ‘원고난·경영난·검열난’의 3년 속에 일제말 전쟁선전과 심리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³⁷⁾ 과거 신문사의 이력이었다. 그러다 해방으로 억눌렸던 욕망이 표출가능해지자 배달제를 실시할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가두판매제를 시행한다. 또한 모든 신문이 수지타산을 무시하고 구독료 없이 무료로 신문을 뿌리면서 정파적 선전매체로서 충실했다. 자연히 ‘신문의 세력’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고, 이 정파성이 문제가 되었다. 과거 식민지기 기자란 우국지사연하면 그대로 행세할 수 있었고 아첨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었다. ‘무관의 제왕’, ‘민족의 대변자’, 지도자, ‘사회의 목탁’, ‘사회적 공기(公器)’ 등으로 자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치단체의 이해관계 대변자로 전락하고 ‘빠라적 신문’, ‘장작적 신문’, ‘낙지적 신문’ 등으로 비난받기 시작했던 것이다.³⁸⁾

정파성은 보도주의적 신문을 실종하게 하였으며,³⁹⁾ 인민은 신문을

35) 한만수(2009, 257-274).

36) 일본에서 만주사변 이후 육군이 신문기사와 사설을 검열하기 시작했고, 국가총동원법 이후 1939년 더욱 강화돼 신문사 내에 자체 검열과 설치가 필요할 정도였으며 1940년 정보국이 신설됐다. 내무성에 납본을 제출했고, 내무성 정보국 검열과에서 군사 관련 기사를 허가했으며, 1941년에는 각 전선 전보를 특정 기사 취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김철우(1947, 53-60).

37) 失鍋永三郎(國民總力朝鮮聯盟文化部), 「戰時文化方策」, 『新時代』(1942/1, 89).

38) 김사림 편(1948, 鶴2-櫻9면).

39) 송진호는 해방공간 기자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1) 처음부터 어느 정당의

불신하기에 이른다. 오보를 해도 자기비판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며, 인민에게 구독을 강권하는 등 독재적이란 비판도 받았다. 언론이 불신을 받게 된 데에는 기자의 책임도 있었다. 해방 후 기자들의 취재력 등 전반적으로 그 자질이 떨어져 인민이 알기 쉽도록 정치적인 사실들을 전달하는데 미숙했다. 그래서 소설가와 시인이 편집국장 내지 주필을 하는 경우, 특히나 무시를 많이 당했다. 인민 역시 직언직필은 잘하면서도 모략기사 등 무상식의 보도로 자기반성이 거의 없는 기자를 경찰보다도 경원시켰으며, 직업상 사교적으로 처세하는 기자를 신용하지 않기도 했다. 또한 식민지기와 달리 술집에 가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생은 상대를 해주지 않고 모리배만 바라봤으며, 여학생의 99%가 배우자로 외교관을 선호하며 기타 교수, 군인 등을 추종하는 현실에서 기자의 가치는 하락했다.⁴⁰⁾

더 큰 문제는 언론사를 대하는 권력층이었다. 돈만 내면 신문이 되는 줄 알거나, 관료적인 일본잔재가 남아 무엇이든 보도하라고 지시하면 ‘항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내야 했다.⁴¹⁾ 서울시 경찰국이나 헌병사령부에서는 취소조치를 해 사실보도를 허위보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⁴²⁾ 장택상은 신문기자에게 일절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기도 했다. 또한 제도적인 억압도 구축되기 시작했다. 미군정이 초기에는 언론의 자유를 천명했지만 정기발행물 간행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미군정법령’ 제88호(1946/05/29)를 공포했고, 민

당원 내지 비밀 당원으로 기자가 된 경우, 2) 특정 정당원은 아니나, 특정 이데올로기의 지지자로서 여론지도자를 자처한 경우, 3) 정당·사회단체에 매수되어 움직이는 경우. 송건호 외(2012, 169).

40) 김사립 편(1949, 34-42).

41) 김사립 편(1948, 鶴14면).

42) 김사립 편(1949, 22-36면).

심을 현혹케 할 선동적 기사를 게재하거나 악영향을 파급할 목적으로 허위보도시 허가를 취소, 정지하고 벌칙을 가하겠다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법’이 입법의원을 통과(1947/07/19)하기도 했다.⁴³⁾ 잡지 『민성』은 “어느 정당 기관지적 성격을 떠나서 공정한 언론의 길을 걷고, 문화면이라도 삼팔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⁴⁴⁾ 북조선특집을 기획했다가 폐간의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 과거 1920년대 중후반 당국의 집회·회합 금지, 압수·발행금지 처분에 항거에 언론은 생존이요, 집회는 그 충동이라고 외치고 자유가 없는 조선은 감옥과 다를 바 없다며⁴⁵⁾ 언론집회의 자유를 주창했던 언론인에게 미군정은 또 다른 식민지배자로 실감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억압은 교묘했다. 해방정국에서 일본정부가 언론통제의 방법으로 용지부족을 활용한 것처럼⁴⁶⁾ 미군정은 1946년 6월 용지난을 이유로 신문의 신규허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를 수시로 정지하는 방식으로⁴⁷⁾ 통제를 가했다.

이러한 인민과 권력자의 비난·전용과 함께, 해방공간이 언론사가 상호경쟁하는 장이었던 만큼 언론사의 허물도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잡지 『민성』은 인민이 일본전범재판에 대한 소식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조선의 신문사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전장에서 ‘여론조사와 설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사와 잡지간의 상호비판적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언론사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했다.⁴⁸⁾ 특히 외국의 기자단과 접견하여

43) 송건호 외(2012, 152-157).

44) “머릿말,” 『민성』(1947/3, 130).

45) 정진석 편(1998a, 183; 1998b, 195, 405).

46) 설국환(1949, 69).

47) 김민환(2001, 241-242).

조선의 내부 실정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에 전파해줄 것을 염원하는 등 민족의 자립과 독립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다했던 것이다.

3. 여론조사 · 설문으로 본 당대 현안과 그 변화상

당시 해방 이후부터⁴⁹⁾ 한국전쟁 이전 무렵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그리고 일부의 조선일보와 자유신문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보도된 기사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론조사의 신뢰

48) 다음의 「신문평」이 보여주듯 자기반성과 외부비판의 존재는 언론의 현실과 함께 소명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지금 동아일보는 ‘우익의 대변자’가 되었는데, 조선일보는 그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장차 공격목표를 택(擲)한다면 그것은 저절로 좌우의 어느 편이 아니면 안 된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 지극히 가느다란 줄을 서툴게 타고 있다. 이 신문의 논진(論陣)이 아무 편에도 썩지 않게 도전적이 아닌 대신에 날카로운 맛, 강한 맛이 적은 것도 이 줄타기의 조심스러운 心情인 줄 알만하다.” 그리고, “자유신문은 이승만이 귀국하여 조선신문기자대회 석상에서 찬사를 할 때 다른 신문보다 발 빠르게 ‘국부’로 올려놓았으나, 며칠 만에 이박사의 독립운동이 공격받자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었고 반탁의 언사를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후 이 신문의 화형기자가 다른 석상에서 자유신문이 좌와 우 모든 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널리즘은 ‘그날그날의 주요 사건중심’을 기사화하는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 「自由의 성격」, 『신천지』(1946/4, 20-21) “인민보는 첫 출발부터 그 논조가 선명하고 예리했지만, 현대의 신문이 가져야 할 요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중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동감되어 따르게 해야 한다. 최근 항간에서는 극우신문을 大東이라고 하고, 극좌신문을 인민보라는 말을 듣는다. 진정한 신문은 욕설이나 사상의 강매를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중의 기관지라면 공명정대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감명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신문 지면에서도 우리는 삼팔선을 보게 되었다. 지면의 상단은 이북이요, 하단은 이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주간(主幹)의 냄새가 너무 강하다.” 『인민보의 위기』, 『중앙신문의 내부』, 『동아일보』, 『신천지』(1946/05, 70-75).

49) 본고에서 ‘해방공간’이란 단정 수립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당대 현안과 의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전쟁 이전까지 참조했다.

〈표 2〉 여론조사 관련 주요 신문 목록

신문보도 일자	여론조사 관련 기사 제목 및 부제
동아일보 1946/01/11 2면	(군정청 사회과 여론조사) 漢字廢止를 一般은 贊成(찬성)
동아일보 1946/04/09 1면	(동아일보)輿論調查局特設 一般社會와의 直結紐帶 各界人士의 名簿登錄
동아일보 1946/04/10 1면	(동아일보 여론조사) 여론조사—일반의 협력
동아일보 1946/04/12 1면	(동아일보 투서모집)民族綱紀의 肅清—구체적사실을 지적한 투서 대환영
자유신문 1946/05/10 1면	여론과 여론조사
동아일보 1946/05/14 2면	(동아일보) 學園에 謀略(모략)의 魔手(마수) 京醫專生들이 단결로 일축
동아일보 1946/05/31 1면	〈미여론조사〉激減된 美大統領의人氣 五個月間에 52%로 추락—트루만
동아일보 1946/06/11 2면	公報課長會議(공보과장회의)—공보연락 여론조사, 악평검토
동아일보 1946/06/20 1면	〈미여론조사〉 美國中心의 世紀의十偉人(세기적 십위인)
동아일보 1946/07/08 2면	참다운 民聲(민성)을 喚起(환기)—“한국여론협회” 신발족(우익)
동아일보 1946/07/11 1면	〈미여론조사〉 트루만大統領(대통령)의 人氣 갈수록 墜落(추락)
동아일보 1946/07/16 3면	(동아일보 여론조사) 輿論은 이라타 左右合作(좌우합작)을 支持(지지)
동아일보 1946/07/16 3면	(한국여론협회조사) 合作支持가 多數—신문특제는 정권수립 후
동아일보 1946/07/23 3면	左右合作의 方法은 무엇 相互理解가 급무 무조건합작이 통일 원칙
동아일보 1946/07/23 3면	(한국여론협회조사) 初代大統領은 누구
동아일보 1946/07/30 4면	(한국여론협회조사) 行事는 統一로 輿論協會의 調查—8.15기념행사
동아일보 1946/08/06 3면	(한국여론협회조사)팔원칙지지가 다수, 위폐공판소동은 공산당계의 모략
동아일보 1946/08/13 3면	(군정청여론조사) 政治自由를 要求 階級獨裁는 絶對반대 (一)
동아일보 1946/08/13 3면	(한국여론협회조사) 左翼合黨(좌익합당)은 類勢挽回의 모략
동아일보 1946/09/04 1면	〈AP記者論評〉 媾和會議는 失敗 미소총통의 불가피를 예언
동아일보 1946/09/25 1면	〈워싱턴 AP합동〉 對蘇政策強化63% 溫和政策支持 11%
동아일보 1946/10/29 1면	〈런던 발〉 『公平(공평)이 五三(오삼)%넘우寬大(관대)가 20%
동아일보 1946/12/19 2면	〈경기도청〉 要救護者輿論調查(요구호자여론조사)
동아일보 1947/02/05 2면	“謀利天下(모리천하)” 濟州島 警察幹部(경찰간부), 통역 등이 주로
동아일보 1947/02/14 1면	〈미국기자단좌담회〉 朝鮮問題의解決은 美蘇間理解成立 안되면 四相, UN에 상정

동아일보 1947/03/29 1면	<워싱턴 AP합동> 共產思想對抗 美國輿論沸騰(미국여론비 등)
경향신문 1947/04/20 1면	<뉴욕 발> 行政院長에 周恩來氏(주은래씨) 主席엔 장개석 씨 지지
동아일보 1947/05/08 1면	<뉴욕 발 UP조선> 蘇聯民主主義國家로 承認(승인)은 겨우 六分之一
경향신문 1947/05/28 1면	<뉴욕 발> 美蘇協調多數(미소협조다수) 美國의 輿論調査
동아일보 1947/06/14 1면	<파리 여론조사 결과> 莫府會議(막부회의)는 失敗(실패)
동아일보 1947/06/22 2면	<공보부 조사> 選舉資格(선거자격) 어떠케?
경향신문 1947/06/27 1면	<파리 AFP합동> 難測의 佛內閣壽命(불내각수명) 輿論調査結果區
동아일보 1947/07/04 4면	臨臨傘下百七十餘團體 共委의 答신원칙을 결정
조선일보 1947/07/06 2면	(기자회) 국호는? 정권형태는? 기자회견서 가두어론조사
경향신문 1947/07/09 2면	(한국여론협회조사) 全南道廳 人事異動 問題(전남도청 인사 이동문제)
동아일보 1947/07/09 2면	不正確한 街頭輿論 記者會의輿論調査反駁 - 신문기자회에 반발
조선일보 1947/07/11 2면	(기자회) 여론조사 비방에 기자회견 논박 성명
동아일보 1947/07/20 2면	<헬믹 대장 성명> 米穀海外輸出說(미국해외수출설) 一部の 虛僞宣傳
경향신문 1947/07/25 2면	<안장관 談> 光州·木浦等地食糧配給 從來小賣商組合職員도 登用善處
동아일보 1947/08/06 1면	<워싱턴 UP조선> 白人威信은 失墜(실추)
동아일보 1947/08/10	(우익)조선신문기자협회 결성 - 동아일보사 안에 사무실
동아일보 1947/09/05 1면	朝鮮問題에 對한 中國의 輿論(여론) (6) - 고대교수 이상은 역
동아일보 1947/09/17 1면	<워싱턴 UP조선> 朝鮮(조선)에UN使節團(사절단)
경향신문 1947/10/23 2면	南朝鮮過渡政府(남조선과도정부) 中央機構改革成案內容
동아일보 1947/11/18 1면	<뉴욕 UP조선>美國輿論 調査結果 對蘇強硬策希望 - 미소간 전쟁설 대두
동아일보 1947/12/14 4면	<공보부 여론조사국 조사> 道義心 잃은 食糧配給所 四十七%가 부정
경향신문 1947/12/16 2면	<공보부 여론조사국 조사> 쌀配給所의 殆半이 不正
경향신문 1947/12/17 2면	記錄(기록)에依(의)해 處決(처결)
동아일보 1948/02/05 1면	유엔朝委(조위)의 意見(의견)은 朝鮮民族(조선민족)의 希望과 일치?
동아일보 1948/02/06 2면	<경기도청> 民間有力者動員(민간유력자동원) 輿論調査를 實施
자유신문 1948/02/16 2면	<자유신문>본보 독자 제1회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희망은 - 서울시, 설문형태
동아일보 1948/03/31 1면	<뉴욕 UP조선> 美大統領候補人氣 듀이氏가 第一位
조선일보 1948/04/10	<한국여론협회> 자발적 선거인등록은 7퍼센트 미만
동아일보 1948/04/16 2면	人心紊亂目的한 『韓國輿論(한국여론)』에斷 公報部서 최후경고
조선일보 1948/04/16 2면	선거관한 여론조사 공보부서 不遠 指摘(지적)

경향신문 1948/04/16 2면	民間輿論調查(민간여론조사)에 過政公報部要請
동아일보 1948/05/19 1면	〈영국 여론조사〉 保守黨의 人氣(인기) 勞動黨(노동당)을 凌如馬
동아일보 1948/07/28 2면	〈상공부 조사〉 商業의指導育成強化 商工部에서 가두여론조사
경향신문 1948/10/29 1면	〈뉴욕 RP공립〉 듀이氏 當選確實(당선확실) 輿論調查結果二對一
동아일보 1948/10/29 1면	〈뉴욕 RP공립〉 一週日(일주일)을 앞둔 選舉(선거) 듀이氏當選確實
동아일보 1948/11/04 1면	〈뉴욕 UP고려〉 大勢(대세)는 듀이氏(씨)에 輿論(여론)으로 본 選舉結果
동아일보 1948/11/20 2면	〈개성 여론협회〉 下情上通의 一案 投書函(투서함)을 配置
동아일보 1948/12/18 1면	〈뉴욕 UP고려〉 美國民對中 援助熱冷却(원조열냉각)
동아일보 1948/12/26 2면	水產資料蒐集次(수산자료수집차) 五國會員地方視察
경향신문 1948/12/29 2면	戊子年政治經濟界總決算(정치경제계 총결산)
동아일보 1948/12/29 2면	〈공보처 조사〉 民論은 이렇다 設問二十(설문이십) — 시청직원 200명 대상
경향신문 1948/12/29 3면	一九四八年文化界回顧(문화계 회고) 似而非出的 배제(承前)
자유신문 1949/02/04 4면	〈공보처 조사〉 여론조사, 공보처서 실시 — 전국설문 대통령이하 국무위원 누구냐. 국무위원 각자에게 소망하는 바 한 가지 적으시오.
동아일보 1949/02/10 2면	民保團弊端是正(민보단폐단시정) 言論人入團強要是 부당
경향신문 1949/02/24 1면	〈포지 미상원 여론조사〉 對蘇聯宣傳(대소련선전)에 贊成(찬성)
경향신문 1949/03/09 4면	〈서울시 공보실 조사〉 市公館問題로 市民輿論調查
동아일보 1949/03/12 2면	휴지통
동아일보 1949/04/05 2면	〈의정부〉 楊州記者團(양주기자단)에서 輿論調查函設置
동아일보 1949/06/21 1면	非國民行動(비국민행동) 調委設置建議(조위설치건의)
동아일보 1949/07/03 1면	〈워싱턴 UP고려〉 平和時最大支出은 美國新會計年度始作
경향신문 1949/07/07 1면	〈동경 UP고려〉 最好國은 美國 日通信(일통신)의 輿論調查
동아일보 1949/07/22 1면	〈뉴욕 UP고려 갤럽〉 美國人(미국인)67% 大西洋同盟支持
동아일보 1949/07/27 2면	國際(국제)스파이事件真相(사건진상) (5)
경향신문 1949/07/31 1면	〈뉴욕 UP공립 갤럽〉 武器援助案(무기원조안)에 贊成輿論49%
경향신문 1949/07/31 1면	餘滴(여적)
동아일보 1949/08/17 1면	〈동경 UP고려〉 永久中立希望 日人輿論調查
동아일보 1949/09/04 2면	〈보건부 전국환자 소원조사〉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 — 문동병자
경향신문 1949/10/11 2면	한글날을 당하여 (下)
경향신문 1949/10/18 1면	產兒制限論(산아제한론)을 駁(박)함
경향신문 1949/10/28 2면	輿論(여론)을 尊重(존중)하라 區民館問題微妙

동아일보 1949/11/07 2면	<경향신문> 農地改革은 어찌 되려나? 나는 이렇게 要望 (여론조사)
경향신문 1949/11/10 1면	<경향신문> 紙上(지상) 國會 開幕(개막)－국회의원 임기연장 문제
경향신문 1949/11/15 2면	<경향신문 조사> 어린이는 國家寶貝－가두방송 및 소년운동 여론조사
동아일보 1949/11/16 2면	<국민보도연맹 조사> 南勞黨員根滅策 頭目死刑으로 可期 자수자의 여론조사
경향신문 1949/11/19 2면	<경향신문 조사> 少年運動 少年은 大韓의 아들 民國의 역군 본사후원
경향신문 1949/12/01 1면	<뉴욕> 카람 輿論調查 承認은 絕對不可(절대불가)
동아일보 1949/12/01 1면	<뉴욕 발 UP한국> 中共承인 反42%, 贊20% 美(미)개입 여론조사
경향신문 1950/01/18 1면	<뉴욕 카람 여론조사소> 共黨은 美(미)의 敵(적)
동아일보 1950/01/30 1면	反對가八割(팔할) 任期延長忠南輿論實態
경향신문 1950/02/03 1면	<경향신문 조사> 協力하라 改憲輿論調查(개헌여론조사)
경향신문 1950/02/10 2면	<경향신문> 겨레關心의 焦點改憲의 與否 본사여론조사반 가두에 진출
경향신문 1950/02/11 1면	<경향신문 조사> “改憲”街頭輿論(가두여론) 本社 서울地區豫備조사
경향신문 1950/02/11 1면	全國調查結果(전국조사결과) 15日(일)까지發表(발표)
경향신문 1950/02/15 1면	<런던 BBC공립> 英總選舉週餘(영총선거주여)에 迫頭 勞動?保守?
경향신문 1950/02/16 1면	改憲全國輿論調查(개헌전국여론조사)17日 發表(일발표)
경향신문 1950/02/16 1면	納稅(납세)는國民(국민)의義務(의무)
경향신문 1950/02/17 1면	<경향신문 조사> 改憲全國輿論(개헌전국여론)
경향신문 1950/02/17 1면	<경향신문 조사> 改憲輿論調查를 마치고
경향신문 1950/02/17 1면	餘滴(여적)
경향신문 1950/02/19 1면	冷靜戰爭(냉정전쟁)의 據點(거점) 東西南北時事解說 (5)
동아일보 1950/02/24 1면	<런던 UP한국> 英國國民의 審判注目 保守勞動兩黨勢力伯中
동아일보 1950/02/24 1면	勞四五(노사오)%保四三(보사삼)% 選舉直前輿論調查

성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표본집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갤럽 조사기관(1933년 창설)이나 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천 명을 표본 크기로 제시하며, ‘무작위’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추출방식이라 한다.⁵⁰⁾ 해방공간의 여론조사는 그 시일을 제외하고 조사인원수만 기술하면

50) 프랭크 뉴포트(미국 갤럽 편집장 2007, 225).

6,671명, 3,678명, 7,709명, 1,960명, 1,149명, 1,262명 등이었다. 나름의 규모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맹이 상당수 존재했던 당대 인민의 지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민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계도하고 이끌 지식층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파악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지금-여기’의 관점에서 얼핏 우익신문을 떠올리면 친일파와의 결탁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우익이든 좌익이든 해방공간의 중요한 역사적 과업 중 하나는 일제청산이었고 특히 친일파 척결은 핵심 사안이었다. 최소한 1946년 4월 동아일보의 움직임은 그런 ‘기대’에 확실히 부응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국은 “민족적 강기숙청”을 내걸고 4월 12일에서 5월 15일까지 전국의 독자에게 “친일파, 민족반역자, 악질수전노, 악질모리배, 악질관공리악질사상가 등”⁵¹⁾을 투서해달라고 보도했다. “민중의 의사”를 모아 추후 적절한 시기에 “민중의 재판”을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겠다는 취지였다. 미군정도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언론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청취하려는 노력이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동아일보 여론조사국은 동년 4월 9일 ‘위로부터’라 할 수 있는 식자층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감행한다. 새나라 역군이 될 전국각계 인사의 명부 등록을 하겠다는 이유로 관제엽서를 보내달라는 광고를 한 것이다. 그 관제엽서에 기입할 사항은 “(1)관청, 정당, 종교단체, 사회단체문화단체, 금융산업기관, 점포 등의 각 부서의 책임자 (2)대학으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의 교직원 전부 (3)의사, 변호사, 저술가 그 외 일반희망자조사항목 (4)성명 (5)주소 (6)연령 (7)최

51) 「民族綱紀의 肅清」, 『동아일보』(1946/04/12, 1).

후학력과 이력 (8)직장과 직함 (9)연구방면과 저서 (10)특기취미, 기술, 전공 (11)소속단체 (12)사상경향⁵²⁾ 등으로 방대하고 자세했다. 엄청난 양과 비용, 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한 언론기관이 너무나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특정 정당이나 정부기관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정치사찰·테러에 이용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여하튼 이 역시 미군정도 쉽게 시도하지 못할 일을 하나의 언론기관이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여론조사나 설문을 할 때 활용을 했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인 활동을 할 때 여론조사를 향한 당대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국을 설치하고 활동을 막 시작할 때가 1946년 4월이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5월 10일 자유신문은 사설에서 ‘여론과 여론조사’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 글을 보면 “근일 흔히 여론의 가치를 논하며 그 조사를 행하는 일이 일종의 신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의 반영과 여론조사가 이 무렵 하나의 ‘유행’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국민의 통일적이고 참된 여론이 형성되도록 지식인들이 적절히 지도하여 여론의 의의를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국민적 여론성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도 기초적 교양을 습득해야 하고, 대답하는 대중 또한 질문자의 유도질문과 상관없이 당당히 자기 의견을 발휘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고 있다.⁵³⁾

52) 『輿論調査局特設 一般社會와의 直結紐帶 各界人士의 名簿登錄』, 『동아일보』(1946/04/09, 1면).

53) 「사설: 여론과 여론조사」, 『자유신문』(1946/05/10, 1면).

이렇듯 참된 민성(民聲)을 반영·조성하겠다는 긍정적 취지를 표방하고 야심차게 등장한 동아일보 여론조사국은 3개월이 지난 1946년 7월 한국여론협회가 발족하면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에 나서지 않는다. 역할을 변경해 한국여론협회나 미군정 혹은 외국 여론조사 결과 등을 대신 보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단정 수립 이전 해방공간의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협회가 주도하게 된다. 한국여론협회와 동아일보, 미군정은, 우익을 대변하는 기관답게 여론조사 결과도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었다.⁵⁴⁾ 물론 우익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당대인의 정치적 민의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살펴보자면 한국여론협회가 발족하고 같은 달 12일 서울 시내 7,709명에게 신탁문제를 물었을 때 신탁논의는 정권수립 후에 하고 우선 좌우합작을 하자는 민의가 50%였다. 그리고 5일 후인 17일 대통령 후보 설문은 이승만이 29%, 김구 11%, 김규식과 여운형이 각각 10%, 박헌영이 1%였다. 또한 28일 좌·우파에 대한 설문에서 우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는 문항이 총 3,678명의 응답자 중 2,196명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설문은 총 4개였다. (1) 좌파는 고집을 버리고 민족적 성의에 입각하라. 247인, (2) 좌파의 합작오대원칙을 지지한다. 568인, (3) 우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바란다. 2196인, (4) 우파는 좌파와 협조하여 나가기를 바란다. 523인. 여기서 (1)번과 (3), (4)번의 대비에서 알 수 있듯 좌파에 대한 설문 구성이 이미 부정적인 질문으로 유도되어 공정성을 잃고 있다.

이렇듯 반공 여론정치가 가시화되고 있을 때 인민이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8월 6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주지하듯 1946

54)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1946년 9월 10일 미군정 정보부의 “미래 한국통치구조에 관한 여론조사”는 우익 성향 설문대상자의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김인걸(1998, 76).

년 5월에 발생한 정판사위폐사건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그것과 좌우합작원칙, 여운형 피습사건을 함께 설문조사한 8월 3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익의 팔대원칙에 대한 지지는 49%인 반면, 좌익의 오원칙에 대한 지지는 9%에 불과했다. 위조지폐공판재판정소동⁵⁵⁾은 ‘공산당의 모략적 테러행위이다’가 53%, ‘당연한 행동이다’는 9%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여운형 피습사건은 ‘(사건 자체가) 허위이다’가 41%, ‘공산당의 모략이다’가 13%, 대답에 응하지 않은 이가 32%였다.⁵⁶⁾ 이것은 비슷한 시점인 8월 13일 군정청여론국 여론조사에서 인민의 70%인 6,037명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와⁵⁷⁾ 명확히 배치된다. 우익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여운형의 피습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언론조작이자, 언론에 현혹된 인민의 현실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론협회가 우익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조작을 했던 하지 않았든, 다음의 조사는 미군정에 대한 인민의 인식을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1946년 8월 11일 서울 4,78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군정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무응답이 98%, 위생시설 개선이 2%였다. 즉 무응답이 군정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식량정책이 53%, 산업운영과 주택관리가 31%에⁵⁸⁾ 달해 군정의 국정운영 능력을 불신하는 민의를 확인할 수 있다.

55) 1946년 7월 말 정판사사건 재판정 소요사건으로 체포된 50명 중 44명이 3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받아 군정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56) 「韓國輿論協會調查」, 『동아일보』(1946/08/06, 3면).

57) 「政治自由를 要求 階級獨裁는 絶對반대 軍정청여론조사 (一)」, 『동아일보』(1946/08/13, 3면).

58) 「左翼合黨(좌익합당)은 類勢挽回의 모략」, 『동아일보』(1946/08/13, 3면).

그런데 이 설문에서 공산당 해소에 따라 좌익정당이 합동하는 문제에 불신하는 입장이 67%였다. 즉 한국여론협회 여론조사는 좌익을 적으로 삼고 있으며, 외부세력인 미군정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해에도 지속되었고, 1947년도 공론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미소공위’였으며, ‘친일파 청산 법안’도 중요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1947년에는 1946년에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던 한국여론협회의 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전남도청 인사이동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잡지 『민성』과 『신천지』에서는 미소공위를 증점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일제청산을 위해 입법위원이 발의한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간상배 처단 법률안에 대한 설문도 이루어졌다. 실질적으로 1947년 최대의 정치적 화두가 여론조사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외면받은 것이다. 2차 공위가 시작되기도 전인 2월 이미 UN상정 얘기가 나왔고, 6월에는 선거 자격을 둘러싼 공보부의 설문조사가 있었다. 우익진영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선거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펼쳤다. 20세에서 39세 중에서는 55%가 20세를 투표가능 나이로 봤고, 30.7%가 초등학교 졸업자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6.2%는 문자해독자에게 선거권을, 25.3%는 교육여부를 불문하고 줘야하다고 했다.⁵⁹⁾ 이렇듯 무지한 인민과 지식인의 정치적 공민권을 대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의제의 오래된 쟁점이 이 당시에 또 제기되고 있었다. 과도입의에서는 좌익청년들을 선

59) 「選舉資格어떠케?」, 『동아일보』(1947/06/22, 2면).

거에서 배제하기 위해 23세로 결정했다가, 대외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확립·선전할 필요성이 있었던 미군정에 의해 21세로 조정되었지만 20세라는 민의는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여론협회와 동아일보, 지배권력의 입장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초에서 단정 이전까지 논란의 핵심은 총선거와 자주정부의 수립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때 한국여론협회에서 1948년 4월 12일 선거인등록이 자발적이었는지 강요였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262명 중 91%가 강제였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동아일보는 보도하지 않았고, 그 대신 조선일보에서 4월 15일에 보도해 버렸다. 그러자 같은 날 중앙청 공보국장이 한국여론협회 여론조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다음 날인 4월 16일 동아일보에서 공보국장의 입장을 전하면서 4월 15일 좌익계열의 보도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취급했다고 적고 있다. 동아일보의 논리에 따르면 조선일보도 좌익계열의 하나가 되고 만다.⁶⁰⁾ 이 조사만을 보면 한국여론협회와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추구한 반면, 동아일보는 권력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까지 단정 이전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시기별로 여론조사 주체를 더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방공간은 한국여론협회, 단정 이후 한국전쟁 이전은 경향신문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다고 범박하게 설명했으나, 각 시기별로

60) 그 이전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간접적이지만 대립한 일이 있었다. 1947년 7월 9일 대한독립청년단과 서북청년회가 좌익계열의 신문기자회 가두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고 비판했다. 「不正確한 街頭輿論 記者會의輿論調査反駁—신문기자회에 반발」, 『동아일보』(1947/07/09, 2면). 그러자 이를 후인 11일 조선일보에서 기자회의 반박 성명을 보도해줬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조선일보가 좌익신문은 아니다. 「여론조사 비방에 기자회 논박 성명」, 『조선일보』(1947/07/11, 2면).

〈표 3〉 시기별 여론조사 주도 기관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한국전쟁 이전
초기 잠깐 동아일보 / 이후, 한국여론협회가 활발히 활동	외국 여론조사의 보도가 주도 (한국여론협회 활동 거의 미비, 공보부 여론조사국 조금)	단정 이전 경기도청, 한국여론협회, 자유신문 실시 / 단정 이후에는 공보처와 개성여론협회에서 실시	전반기 공보처, 서울시, 의정부 실시 / 중반 보건부 / 1949년 후반부터 경향신문이 대대적으로 활동
-	* 외국 여론조사 일관되게 많이 등장(미국 가장 많음; 영국, 프랑스, 일본 가끔) * 조선의 행정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해 정책 반영		

여론조사의 주체를 더 구체화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단정 이전에는 한국여론협회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군정청의 여론조사, 그리고 1946년 후반부터는 외국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때 남조선에 전해지는 외국의 여론조사는 주로 미국이었다. 남조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은 남조선의 미군정과 남조선 밖의 미국으로 구별되어 논의할 수 있다. 미군정은 소련과 달리 조선의 쌀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으며,⁶¹⁾ 조선 독립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고, 정치적·영토적 야망이 없다는 것을 주입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미국 현지 소식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했다. 1946년에는 미국 내 점증하는 미·소 간 전쟁 즉 3차 대전에 대한 염려의 목소

61) 소련이 북조선의 쌀을 가져간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미군정이다. 따라서 미군정이 부족한 남조선의 미곡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본에 조선의 쌀이 수출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군정장관대리 헬믹 대장은 수출설을 해명하는 성명을 해야 했다. 『米穀海外輸出說 一部の 虛偽宣傳』, 『동아일보』(1947/07/20, 2면); 「미군정의 대답은 무엇이냐? 조선 쌀 500만석 일본으로 가다, 김현식·정선태 편(2011, 316) 참조.

리였다. 당연히 발발의 원인은 소련이 될 것이라며 책임을 소련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1947년에는 미소대결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반공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외국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정치는 국내외의 각기 다른 입장이 중첩되면서도 일면 단일한 반공주의로 수렴하려는 욕망을 드러냈다. 해방공간은 민족·국가의 역사를 (재)구축하기 위한 각종 기억이 분투하는 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기억만을 전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당대 현재의 매순간 재구축해가야 했고 그때 선별돼 유입된 외국 여론조사도 일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6년에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지도도 하락이 자주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사는 조선인도 이제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당연한’ 권리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선택이란 선거를 의미했고 따라서 남조선에서도 1947년 선거법이 다뤄지고 1948년 5월 총선거가 강요이든 아니든 호기심의 대상이자 중요한 정치실천이기도 했다.⁶²⁾ 미국에서도 동년 11월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반공주의와 그에 따른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대통령 선거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단정 이전부터 꺾림이 선거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발표했다. 당시 꺾림은 공화당 후보 듀이의 대통령 당선을 확신했지만,⁶³⁾ 실제로는 민주당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꺾림여론조사조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실’을 명백히 한 사건이었다. 미 대선은 조선인에게 여론조사에 회의를 품게 하는 동시에 노자협조를 우선하는 민주당과 미국인의 미소제휴, 공화당의 국수주의 비판, 평화지향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62)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행선(2012) 추가 참조.

63) 「듀이氏 當選確實 輿論調查結果 二對一」, 『경향신문』(1948/10/29, 1면).

이 미국 대선은 남조선의 단정수립 이후에 있었고, (한민당과 이승만이 멀어지기도 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론조사의 주체와 경향도 바뀌게 된다. 기존 여론협회는 대한민국여론협회로 바뀌지만, 단독정부수립으로 반소반탁, 미소공위 등 다양한 정치 대립적 요소가 사라졌고, 우익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어 남/북조선을 둘러싼 정치적 의제를 여론조사로 다루는 것은 극히 줄어들게 된다. 이제 관심은 새롭게 수립된 정부에 집중되었고 체제안정과 지속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일례로 1949년 2월 공보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이 누구이며, 이들에게 소망하는 바를 한 가지 적으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여론협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의를 반영하는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았고, 정부와 체제의 공고화를 꾀하는데 주력했다. 그래서 국수주의를 비판했던 일부 미국인의 교훈을 망각하고, 남한 내 미군사 고문단 철퇴를 요청한 6명의 국회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非韓행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국적 국수주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정수립과 여순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반공주의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반공의식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는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사도 없었다.

따라서 단정 수립 이후 국내에서는 설립된 정부의 민주적 운용과 실제 인민의 삶의 개선이 여론조사의 핵심을 이루었다. 당대 주요 국정현안은 토지개혁, 국회의원 임기연장 문제 등이었고, 특히 경향신문이 엄청난 규모로 주도한 ‘개헌 여론조사’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다. 또한 단정 수립 이전 과도정부가 민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국을 운영해가는 국정능력을 인민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전 절에서 말했듯이) 여론조사는 이미 사회조사로서 행정력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었다. 이 시기에도 서울시, 의정부, 보건부⁶⁴⁾ 등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을

운영해 나갔다.

토지개혁 문제는 과거에 단정수립 이후에 논의하자고 미루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중요안건으로 대두 되었던 것이다. 이런 논의의 근저에는 정부가 수립되면 인민의 삶도 그만큼 더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새롭게 국민의 대표가 된 지도자들을 향한 관심이 높았고, 그 기대와 어긋날 경우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경제재건과 민주사회의 실현을 갈망한 국민은, 총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 지나친 대통령의 권력, 나아지지 않은 삶의 조건 등을 새삼 자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저한 민주정치와 책임 정치를 열망한 젊은층이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반대했다.⁶⁵⁾ 그러나 국민의 국회의원 지지 상실과 달리 이승만 대통령을 향한 장년층의 지지는 여전히 강고하기도 했다. 과거 독립운동의 경력과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⁶⁶⁾ 강국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를 취해야 국가의 번영도 보장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했다. 반공주의를 유포한 지배권력의 의도가 인민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미 상당수 국민 역시 체제 내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였으며, 미국 제도를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고 맹신하는 의식과 지배세력의 정치적 결탁의 원형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외국 여론조사는 역시 갤럽여론조사소가 주도한 미국이 중심이었고 ‘반공주의’가 핵심이었다.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 국민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지출과 국민당의 열세 등 중국내전을 둘러싼 미국 내 입장 등의 정보들이 주로 유입되었고, 대외적으로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있었다.

64)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문동병자」, 『동아일보』(1949/09/04, 2면).

65) 「反對가 八割 任期延長忠南輿論實態」, 『동아일보』(1950/01/30, 1면).

66) 개헌 여론조사는 경향신문이 대대적으로 행했다. 「改憲往頭輿論 本社 서울地區豫備조사」, 『경향신문』(1950/02/11, 1면); 「改憲全國輿論」, 『경향신문』(1950/02/17, 1면) 등.

신문과 함께 상호보조적 역할을 한 잡지의 ‘설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1947년 여론조사의 성격을 구명할 때 유효한 참조점이었다. 해방공간의 주요 문예잡지인 민성, 신천지, 백민의 설문을 참고했다. 백민은 설문 답변이 부실해 참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정수립 이전까지 중간적 입장이었다고 평가받는 신천지와 좌익에 가까웠다고 하는 민성은 한 국여론협회와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⁶⁷⁾ 인민을 향한 직접적인 지도라는 역할은, 여론조사와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직접 살펴본 결과 이들 잡지는 설문을 할 때 그 대상을 정치적으로 좌, 우, 중간 끌고루 배치해 나름 균형 잡힌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 견해는 설문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 목소리로 나타나 신문과의 직접적인 내용비교는 의미가 없었다. 정치적 의제도 동일한데 특이점이라면 잡지의 설문의 경우 답변자의 사회적 위치,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그렇지 않았던 신문의 경우와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1947년 3월 민성에서 입법의원 초안 관련 설문을 하는 경우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조인을 확보하였다. 즉 설문대상자를 설정할 때 해당 설문에 합당하는 전문가들을 배치해 그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올바른 민중여론의 형성을 위해 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유신문 사설의 견해를 잘 실천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문과 달리 설문의 의제가 책과, 청년을 위한 조언, 미국영화 등 정치의제에서 벗어나 교양과 문화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신문을 통해 살펴본 민심은 (뼈라의 예처럼) 거친 거리투

67) 잡지 『민성』과 『신천지』 설문의 대략적인 목록은 논문 뒤 〈부록〉에 정리했다.

쟁으로부터 성장한 인민의 여론⁶⁸⁾·정서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는 조작됐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인민과 지식인·과도정부 등 여론정치가 구축되는 복합적 정황과 그 과정에 개입한 언론기관이 행한 노력들은 긍정할 만하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인 해방공간에서 여론조사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과 미군정 등 각종 정치세력이 다수 인민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해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조선의 민주주의를 보완·발전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 그럼에도 한국 여론협회나 미군정의 반공주의적 경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에는 당대 헌법의 개헌과 삼권분립, 선거의 문제, 그리고 관청의 효율적인 행정수단과, 정국운영을 위해 민심 파악차원의 공보처 조사 등 실질적 삶의 문제가 여론조사의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해서는 단정 이전의 반공주의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68) 해방 이후 ‘세론(世論)’이란 용어가 ‘여론(輿論)’과 함께 쓰였다. 서울신문에서 기자들이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49년, 1951년, 1954년에 걸쳐 ‘사교실’이라는 작은 책을 발간했다. 거기에는 신문, 통신사, 기자, 정당,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용어 해설 및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여론과 세론의 차이를 궁금해 한다면서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천일방 1954, 13면).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 여론은 메이지 원년(1868) 천황의 신정부 시정방침을 논한 「5개조의 서문」의 제1조에 등장했고, ‘세론’은 1882년 발표된 「군인칙유」에 등장했다. 여론(public opinion)과 세론(popular sentiments)은 전전(戰前)까지는 구별해서 사용되어 왔다. 여론과 세론의 구체적 내용과, 정치에서 여론이 어떻게 세론이 되었는지는 사토 타쿠미(2008) 참조.

참고문헌

- 권보드래. 2002. “신문, 1883~1945.” 『오늘의 문예비평』 47. 2002.12.
- 김 균. 2011. “해방공간에서의 의식통제: 미군정기 언론·공보정책을 중심으로.” 『언론문화연구』 17.
- 김민환. 1991.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_____. 2001.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출판.
- 김보미. 2012.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김사립 편. 1948. 『新聞記者手帖』. 모던出版社.
_____. 1949. 『一線記者의告白: 新聞記者手帖 姉妹篇』. 모던出版社.
- 김영희. 2005. “미군정기 농촌주민의 미디어 접촉양상.” 『한국언론학보』 49.
- 김인걸 편. 1998.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 김철우(金哲宇). 1947. 『日本戰犯者裁判記』. 朝鮮政經研究社.
- 김학재. 2011. “정부수립 전후 공보부·처의 활동과 냉전 통치성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74.
- 김현식·정선태 편. 2011.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2001. 『시뮬라시옹』. 민음사.
- 서인식. 2006. 『서인식 전집』 2. 차승기·정종현 편. 역락.
- 설국환(薛國煥). 1949. “일본의 언론자유.” 『일본기행』. 수도문화사.
- 송건호 외. 2012.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다섯수레.
- 안종묵. 2012. “한국 언론 구조의 성격과 형성에 관한 고찰.” 정근식·이병천 편.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민주주의』 2. 책세상.
- 이경돈. 2010. “삼천리의 세와 계.”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천정환 외 편. 성균관대 출판부.
_____. 2011.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식민지의 여론시대와 관계 매체.”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 이성근. 1985. “해방직후 미군정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25.
- 이성용. 2003. 『여론조사에서 사회조사로』. 책세상.
- 이행선. 2012. “(비)국민의 체념과 자살—일제말, 해방공간 성명·선거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장영민. 2001.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16.
- 전상인. 2001. “1946년경 남한주민의 사회의식.” 『고개 숙인 수정주의』. 전통과현대.
- 정다운. 2006. 『주한미군의 선전활동과 농민주보』. 서강대 석사논문.
- 정용욱. 2003.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2. 역사비평사.
- 정진석. 1995.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 _____. 2008.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진석 편. 1998a. 『日帝시대 民族紙 押收기사모음 I』. LG상남언론재단.
- _____. 1998b. 『日帝시대 民族紙 押收기사모음 II』. LG상남언론재단.
- 차재영. 1994.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5.
- 천일방(天一方). 1954. 『속 사교실』. 수도문화사.
- 천정환 외 편. 2010.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 출판부.
- 프랭크 뉴포트(미국 꺄럽 편집장). 2007. 정기남 역. 『여론조사』. 휴먼비즈니스.
- 한만수. 2009.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의 문예면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한혹구. 1942. “문화상으로 본 미국인의 성격.” 『조광』, 1942년 4월호.
- 한혹구·민충환 편. 2009. 『한혹구 문학선집』. 아시아.
- 사토 타쿠미(佐藤卓己). 2008. 『輿論と世論-日本の民意の系譜額』. 新潮社.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
론조사 1, 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영문자료).
Gayn, Mark. 1981[1948]. *Japan Diary*. Charles E. Tuttle.

〈언론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민성』, 『新時代』, 『신천지』.
『자유신문』, 『조광』, 『조선일보』.

〈부록— 설문자료〉

잡지 일자	잡지 설문 제목 및 내용	필자
1945. 12. 『민성』	1. 8월 15일 정오 일본항제가 항복방송을 할 때 귀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 그때의 감상은?	시인 김안서, 조선어학회 이극 로, 경기고교 교장 高鳳京, 평론 가 이원조, 민속학자 송석하, 소 설가 안희남, 梁樞煥
1946. 2. 『신천지』	漢字廢止의 可否 國文 橫書의 可否	林和, 金南天, 李軒求 外 23名
1946. 2. 『신천지』	1. 8월 15일의 감격 2. 과거 일본인의 죄악 3. 조선독립은 언제? 4.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원하나	林和, 金南天 外 24名
1946. 2. 『민성』	* 각 정당의 대답은 이렇다—1. 신탁통치를 어 떻게 생각하는가? 2.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 갈까? 3. 귀 당의 책임은 없는가? 4. 귀 당은 곧 해체할 용의는 없는가?	국민당 안재홍, 공산중앙당위원 회, 한국민주당 함상훈
1946. 5. 『신천지』	1. 第3次 世界大戰이 일어나겠다고 생각하십 니까?(어째서) 2. 만일에 일어난다면 어떠한 陣營으로 갈리겠 습니까? 3. 안 난다면 現在의 複雜한 情勢를 어떠한 方 法으로 收拾해야 하겠습니까.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 李康 國, 함상훈, 설의식, 서울신문 서 강백, 소설가 이태준, 백남운, 오 기영 등

1946.7. 『민성』	1. 좌우합작은 가능한가? 2. 소련영사관 철폐와 미소관계·조선임시정부 수립관계는? 3. 미소공동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재개될까?	조선민주당 김병연, 인민당 이강국, 한국민주당 함상훈, 민전의장 이태준, 김광섭, 김남천, 이현구
1946.7. 『민성』	1. 우리 청년에게 읽히고 싶은 책은? 2. 청년에게 주고 싶은 말은?	신남철, 민주일보 사장 嚴恒燮, 이태준, 이현구, 박치우, 이원조, 김광섭
1946.12. 『신천지』	1. 미소공위는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2. 공위가 속개된다면 그 성과가 어찌되겠습니까 3. 미소 양 대표자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	민족문화연구소 이복만, 민주일보사 한선용, 동아일보 설의식, 경향신문사 염상섭, 이극로 등
1947.10. 『민성』	* 民擾와 공위와 합작의 비판 - 1. 남조선민요 발생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가? 2. 미소 협조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3. 좌우합작 7원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대학 교수 손병태, 동아일보사 설의식, 신민당 중앙위원 최성환, 조선민주당 李允榮, 인민당 李如星 등
1947.3. 『민성』	* 어떻게 보는가? - 1. 입법위원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간첩배척단 법률초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귀하는 초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도착순) 변호사 강중인, 서울지방검찰국장 김용찬, 서울지방검찰청 검찰관 김임용, 서울지방시밀원 심판관 최두옥 등
1947.4. 『민성』	* 공위속개와 좌우여론 - 1. 미소공위의 재개와 그 결과는? 2. 만일 합의를 보게 된다면 임정구성에 있어서 좌우비율? 3. 결렬되는 경우에는 남조선단정을 어떻게 보며 그 귀추는?	세계일보 주필 배성룡, 조선어학회 이극로, 조선통신 편집국장 이종모, 한국민주당 선전부장 함상훈, 조선애국부녀동맹 박은성 등
1947.7. 『민성』	* 조국조선에의 희망 - 1. 귀하는 본국에 어떠한 정체가 서기를 희망하십니까. 2. 귀하는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좌기중 어느 것을 희망하십니까. 3. 귀하는 본국에 있어서 어느 것을 희망하십니까. 4. 귀하는 여하한 사정으로 귀국하지 않습니다. 5. 귀하의 재류동포의 민생문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6. 귀하는 현 세계 각국 중 어느 나라가 선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7. 귀하는 재일동포가 무엇을 연구하여 본국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일본조선동포의 여론조사
1947.10. 『신천지』	* 철자법 문제 * 한자문제(소학교에서 한자폐지의 가부) * 한자어문제 * 현재의 소학교 교과서에 대한 감상	새한민보사 설의식, 자유신문 李貞淳, 중앙중학교 金泓基, 李熙昇, 이용규, 서울창신공립국민학교 고락균, 염상섭 등

1948.1. 『민성』	* 1948년? — 1. 자주정부가 설립되리라고 보십니까? 2. 삼팔선이 제거되겠지요? 3.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 세 가지는? 4. 부디 없애야 할 것 세 가지는?	자유신문사 편집국장 李貞淳, 계용묵, 홍종인, 독립신보 편집국장 서광운, 평론가 김동석, 오기영 등
1948.1. 『신천지』	* UN과 조선 문제 — 1. UN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실현되겠습니까. 2. 소련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선생이 생각하시는 조선문제의 해결안 4. 소련의 참가없이 대일강화회의가 성립되겠습니까. 5. 인도 대표가 조선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한 이유는	함상훈, 세계일보 주필 배성룡, 소설가 염상섭, 평론가 정진석 등
1948.1. 『신천지』	* 미국 영화에 대하여 — 1. 해방 후에 보신 미국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이 깊었던 영화, 2. 이런 것은 수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영화, 3. 대전 전의 영화와 특히 달라졌다고 느끼신 점, 4. 귀하가 좋아하시는 스타는 누구, 5. 미국영화에 대한 귀하의 비판	韓道三, 宋志英, 서광제, 박인환, 임동규, 신문기자 許植, 신문기자 趙敬姬, 소설가 허준, 趙豐衍 등
1948.8. 『민성』	* 조선인교육문제를 어떻게 보나 — 1.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2. 교과서는 조선인초등학교편찬위원회에서 제일조선인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한다. 3. 경영관리는 학교단위로 조직된 학교관리조합에서 행한다. 4. 일본어를 正科로 채용한다.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에서 일본정부 문부성 당국의 조선인학교 강제폐지 문제에 관하여 ‘각계 일본인 인사’에게 설문조사
1949.5.6. 『신천지』	* 미군 철퇴와 통일 문제	
1949.8. 『민성』	* 국회의원에 대한 세 가지 질문 — 1. 귀하가 투표 선출한 국회의원은 공약대로 행동합니까. 2. 시중 일관하게 무언거수하는 의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3. 무소속의원들의 정당 가입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홍, 국도신문 주필, 이현구, 이진태, 서울중학교장 김원규 등
1949.10. 『신천지』	1. 당신은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2.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당신이 보고들은 민주주의풍에 대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 3. 貴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십니까?	염상섭, 김광섭, 김영랑, 李貞淳, 최현배, 안수길, 고재욱, 최영수, 김동성, 趙寅鉉

투고: 2013.3.31 심사: 2013.4.11 확정: 2013.5.19